

성균중국연구원  
특별분석리포트

# 2026 양회 분석 특별리포트

2026.03.10.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원

# 목 차

Executive Summary .....	3
I. 외교 분야 .....	5
1. 2025년 평가 및 2026년 기조	
2. 미중관계: 4월 정상회담 대비 대화 의지 강조	
3. 양안관계: 레드라인 재확인 과 통일 기반 구축	
4. 글로벌 사우스와 주변 외교: 미국 일방주의의 반사이익 추구	
5. 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5대 해결 원칙 제시	
6. 평가 및 함의	
II. 정치 분야 .....	10
1. 당정관계: 당 국정운영의 법제화 강화	
2. 당군관계: 정치건군과 군 현대화의 동시 추진	
3. 중앙-지방관계: 차등 발전의 허용과 인사평가 규율 통제 강화	
4. 국가-사회관계: 복지, 사회거버넌스 정체성을 결합한 '관리된 포섭'	
5. 평가 및 함의	
III. 경제 분야 .....	15
1. 2025년 평가와 2026년 목표	
2. 거시운용기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3. 산업정책: 제도와 과학기술 혁신의 공통적인 추진	
4. 대외경제: 대외 불확실성 속 제도형 개방	
5. 평가 및 함의	

**IV. 사회 분야 ..... 20**

1. 2025년 주요 실적과 15.5개년 기획 목표
2. 노동시장: '고용은 민생의 근본' 기조 유지
3. 사회보장: 체계 완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
4. 공공서비스: 교육과 의료의 평등화 추진
5. 평가 및 함의

**부록: 양회 일정 및 정부공작보고 요점 정리 ..... 25**

## Executive Summary

- ▶ 중국은 2026년 양회를 통해 당·국가체제의 강화, 군 현대화 가속, 내수 중심 경제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였음.
- ▶ 대외적으로는 미중관계 안정화 의지와 글로벌 사우스 결집을 동시에 추구하며,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반사이익 확보를 도모함.
- ▶ 한국에는 한중관계 복원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중국의 대내외 정책 기조가 지닌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선별적 협력과 능동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한 시점.

### ○ 외교: 대미 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 의지 표출

-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관계 안정화에도 무게를 둠.
- 대유럽 관계 재편, 주변국 및 글로벌 사우스 결집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의 반사이익을 도모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 의지 표출
- 한국 및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중관계 안정화와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동시에 노정

### ○ 정치: 법제화를 통한 당 권력의 제도화

- 2026년 양회는 국가발전규획법,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의 입법을 통해 당의 통치 방식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당·국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이는 당의 전략과 정책 집행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음.
- 아울러 중앙-지방 간 수직적 정렬을 강화하는 한편, 군 현대화와 정치군인의 결합도 함께 추진됨.

### ○ 경제: 질적 성장 전환과 내부 헤징 전략

-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소폭 하향 조정하여 고속 성장보다 질적 향상과 구조적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초장기 특별국채(1.3조 위안), 재정적자율 4% 확대 등 적

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지지함.

- 첨단 제조업·디지털경제·AI·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중 관세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내부 헤징(Hedging) 체계를 구축함.

#### ○ 사회: 민생을 '소비 자산'으로 재정의

- 15차 5개년 계획 20개 목표 지표 중 7개를 민생 분야에 배치한 것은 이례적 수준으로, 민생 투자를 복지 비용이 아닌 내수 확대와 사회 안정의 자산으로 재정의한 것임.
- 유연고용 노동자(약 2억명) 사회보장 편입, '일로일소(一老一小)' 정책 강화 등을 통해 가계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임.

## I 외교 분야

### 1. 2025년 평가 및 2026년 기조

- 전례 없는 외부 충격과 국내 난제들이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통해 대내외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자신감 표출
  - 미국과 다섯 차례의 무역협상과 경주 APEC 계기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견을 관리하면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다자외교 무대에 참여함으로써 보호주의와 일방적 패권 추구를 반대해왔다는 점을 외교적 성과로 제시
- 평화 독립의 외교정책 고수, 평화 발전 견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반대, 국제적 공정과 정의 수호를 부각하고,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 의지 재확인
  - 정부공작보고에서 2025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발전, 안전, 문명, 거버넌스) 이행을 강조
  -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과 관련한 논의에 많은 비중을 할애
- 15.5 계획의 고품질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중점과제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 개방 환경 마련, 인적 교류 활성화,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지원을 제시
  -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비차별적 환경 확보, 비자 정책의 최적화, 지방정부의 국제자원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
- 2026년 국방비 증가율의 소폭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를 지속 확대하면서 질적 전환과 군 현대화 가속화 추진
  - 2026년 국방비 증가율은 약 7%(2023~2025년 국방비 증가율 약7.2%)로 국방예산은 1조9095억 위안으로 편성
  -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15.5 군사건설계획 편제와 군사이론현대화추진공정(军事理论现代化推进工程) 등을 명시하여 2027년 건군 100주년 군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성과 점검과 가속화 의지 표명

## 2. 미중관계: 4월 정상회담 대비 대화 의지 강조

○ 미중관계에서 고유한 원칙과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 가능성 강조

• 미국을 겨냥하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강을 통해 경제무역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히는 한편 2025년 미중 무역협상과 정상회담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안정화의 가능성과 의지 표명

-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겠다는 의지보다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면화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음.

- 러우친젠 전국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중이 친구가 되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자 현실적 필요라는 점을 강조하고, 평등·존중·호혜 원칙을 견지하면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

-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는 미중관계의 매우 중요한 해로 고위급 교류 의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기존 이견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함으로써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대만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하여 반세계화와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세계화 추진과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 수행 의지 표출

•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의 영향으로 대중국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상호 이익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

- 중국-유럽 협력은 상호의존과 이해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보호주의를 '다락방', 중국 시장을 '운동장'에 비유하면서 중국 탈동조화의 현실적 한계를 꼬집고, 협력의 필요성 부각

## 3. 양안 관계: 레드라인 재확인 and 통일 기반 구축

○ 대만문제에 대한 방침의 유의미한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고, 기존 입장이 유지·강화되는 가운데 단기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 흡수 통일 기반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시대 당의 대만문제 해결 총체방략> 심화 관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 견지라는 기본방침과 대만독립 분열 세력 타격, 외부세력 간섭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섭전략도 병행하면서 표현 수위의 조정 외에 원칙적 변화는 없음.
- 대만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반대(反对)'에서 '타격(打击)'으로 그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한 경고 및 억지의 메시지 전달<sup>1)</sup>
  - '평화통일' 키워드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생략되어 대만에 대한 강압 행사 옵션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민진당이 대만독립 분열 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책임을 전환
  - 양안 교류, 협력, 융합 발전 심화, 대만 동포 동등 대우 정책 실현, 중화문화 공동 계승·발양 제시
- 정부공작보고에서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과 함께 10월 25일을 '대만광복기념일'로 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향후 통일 논리의 역사적 기반으로 반복 인용될 구조 형성
  - 2025년 10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대만광복기념일 지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가결하여 대만의 일제 식민통치 해방을 중국 정부의 대만 주권 회복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일부인 대만의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연결고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
  - 이에 대만은 10월 25일을 '대만 광복 및 진먼 구닝터우 대승 기념일'로 지정하고 중국이 역사를 왜곡한다며 반발한 바 있음.

#### ○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한 경고 메시지 발신

- 중국의 내정인 대만 사무에 일본이 개입하고 대만 유사시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반문하고, 일본 평화헌법의 공동화(空洞化)에 우려 표명
  - 2026년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임을 내세워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대만을 명분으로 한 군국주의 재현 움직임에 대한 공세 강화

1) 2024년 2월 대만공작회의(对台工作会议) 성명에서 "대만독립 분리주의에 대한 타격(打击)" "타독(分裂)"을 언급한 바 있고, 전국인대 정부공작보고에는 2026년 처음 등장

#### 4. 글로벌 사우스와 주변 외교: 미국 일방주의의 반사이익 추구

○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 혼란과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사우스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반사이익 추구

•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G77 등의 다자협력 플랫폼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부각

- 왕이 부장은 지난 40년간 글로벌 사우스의 세계 경제 점유율은 24%에서 40%로 증가하여 다극화의 핵심동력이 되었음을 피력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협력이 제3자의 방해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아프리카에 대해 '전천후 파트너'로서 상호 지원, 전 품목에 대한 무관세 실시, 인문교류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2026년 브릭스 의장국을 맡은 인도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함께 속한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당부

-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대국 경쟁과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인본주의, 행동 지향의 원칙은 국제사회의 공동 염원과 부합한다고 밝힘.

○ 중국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주변국 및 동맹정책과 차별화 시도

•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우호, 성실, 상호 이익, 포용의 원칙을 실천하고 개방적인 지역주의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온 것이 현재 아시아 안정과 번영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주변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대외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중국은 스스로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동맹국들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대중국 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5. 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5대 해결 원칙 제시

-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강대국의 역할 강조
  - 이란 및 중동 관련 문제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국가주권 존중 △무력남용 방지 △내정 불간섭 원칙 견지 △정치적 문제 해결 △강대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제시
    - 러우친젠 전국인대 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나라도 국제 정세를 통제하고 다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발전의 이점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위와 같은 입장과 문제 해결 원칙 제시를 통해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 모두를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재자로서 역할 수행 가능성을 드러냄.

## 6. 평가 및 함의

- 왕이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중관계,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중관계 안정화와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교착을 동시에 반영
  - 한중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미중관계, 이란전쟁,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더욱 시급한 의제들이 다수 존재하고, 2026년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공개 의제로 다룰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중관계가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기는 했으나 구조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현안이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소통 체계를 지속해야 함.
    - 특히 중국이 다자외교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은 중국에 우호적인 포지셔닝을 요구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15.5 계획의 고품질 발전과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중국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비차별적 환경 확보, 비자 정책의 최적화,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활성화 등은 한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협력과 직결되는 의제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딜레마를 표출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레토릭의 설득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도 대북한 영향력 행사의 유인과 한계가 공존하는 복잡한 국면에 놓여 있음을 이해하고,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공간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II 정치 분야

### 1. 당정관계: 당 국정운영의 법제화 강화

- 2026년 양회는 대표성을 확대하기보다 당-국가 운영체계의 운영체제를 법제화를 통해 정렬하고 당이 주도하는 계획을 모든 영역에서 일체화하는 양상을 보임.
  - 2025년 전국인대가 7개 의제 중 유일한 법안으로 대표법개정안을 올려 대표-민중 연결과 대표활동 제도를 손봤다면, 2026년 전국인대는 정부공작보고와 15·5 기획 초안 뿐 아니라, 국가발전규획법·민족단결진보촉진법·생태환경법전 세 개의 굵직한 법안 설명을 함께 올림.
  - 전국인대 상무위 보고는 국가발전규획법 초안을 다시 강조하면서, 당이 국가발전계획의 제정·실시에서 가진 “성숙한 방식”을 법률로 고정한다고 설명함.
  - 상무위 보고는 또한 현행 법률·법률해석·결정을 전면 점검해, 상무위가 통과시킨 104건의 법률·법률해석·결정은 실효 처리하고, 전국인대가 통과시킨 35건의 효력 문제는 이번 대회에 넘겨 처리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단순 기술정비라기보다, 15·5 개막에 맞춰 기존 규범질서를 일괄 재정렬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음.
- 국가발전규획법(초안)은 헌법에 근거해 국가발전계획의 제정과 집행을 규범화하는 기본법으로 정의하고, 계획을 “당의 중장기 통치 방식”으로 전제함.
  - 국가발전규획법은 중장기 계획을 당의 치국리정의 중요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국가발전계획의 제정·심사·비준·집행·감독을 법으로 고정하는 데 둠.
  - 초안은 당중앙의 제안과 결정 배치에 따라 국무원이 계획을 편성하고, 당중앙·국무원 심

의 후 전국인대가 심사·비준하며, 이후에는 연도계획·각급 각종 계획·정책수단이 모두 국가발전계획을 지지·협동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에 동적 모니터링, 중기·총괄 평가, 전국 인대·감찰·감사 감독까지 규정함.

- 이는 당의 전략적 의도를 입법·행정·지방·감사감찰의 규범 사슬로 내리는 설계로 볼 수 있음.

○ **생태환경법전은 환경정책을 단편 규제에서 벗어나 법전형 통치 도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생태환경법전 초안은 5편 1242조로 구성되고, 현행 환경보호법 등 10개 법률을 전부 법전에 흡수해 별도 존치하지 않으며, 20여 개 관련 법률의 핵심 조항을 부분적으로 끌어 들임. 동시에 기후변화, 탄소피크·탄소중립, 녹색저탄소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 단행법이 없는 영역을 법전 안에 원칙적·선도적 조항으로 미리 넣음.
- 러우친젠 전국인대 대변인은 이를 중국의 두 번째 “법전” 명명 법률이라 설명하며, 기존 환경·오염방지 법률을 흡수하고 기후변화·탄소피크·탄소중립에 관한 원칙 조항까지 넣어 시대성과 전향성을 확보한다고 말함.

○ **2026 양회는 ‘민주 참여’를 앞세우기보다, 당이 주도하는 계획을 민주 법치 언어로 정당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치성을 드러냄.**

- 시진핑 주석은 3월 5일 장쑤 대표단 발언을 통해 “5개년 계획의 재정 실시는 국가 제도 안배”라 언급하며, “좋은 계획과 집행력”을 결합해야 하며, 계획 과정 자체가 전과정 인민민주(全过程人民民主)의 과정이라고 말함.
- 2024년 장쑤 대표단 발언이 ‘신질생산력’ 그 자체에 방점이 있었다면, 2025년은 “경제 대성 책임”, 2026년은 계획의 국가 제도화와 집행규율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음.
-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정협 보고에서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협력·정치협상 제도”를 전면에 놓고, 당의 전면 영도가 정치협상·민주감독·참정의정 전 과정에 관철돼야 한다고 적시함.
- 결국 2026 양회에서 나타난 법제화는 당의 전략을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집행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기반 구축에 가까우며, 이는 개별 부문정책이 아니라 법전·정리·정합성 확보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규범 틀을 재편하는 방식임.
- 미·중 경쟁, 부동산 후유증, 지방채, 인구감소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자율성 확대보다 집행 정렬과 책임 사슬의 명문화를 택한 것으로 보임.

## 2. 당군관계: 정치건군과 군 현대화의 동시 추진

- 2026년 양회에서 당군관계는 군 현대화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충성 체계를 재확인하고자 함.
  - 3월 7일 시진핑 주석은 해방군·무경 대표단에서 정치건군(政治建军)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영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군 내부에는 당에 이심(二心)을 품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부패분자가 숨을 곳도 없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15·5 개시와 동시에 자금흐름·권력운영·품질관리·중대 프로젝트 감독·군-지방 융합 감독을 엄격히 하라고 지시함.
  - 위 발언은 반부패가 단순 청렴 문제가 아니라 군대 현대화와 당에 대한 절대충성의 문제로 다시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근 중국 정치 엘리트와 군부의 숙청 흐름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음.
  - 정부공작보고도 군위주석 책임제, 정치건군, 정치정훈, 국방발전 중대공정을 함께 언급
  - 3월 9일 신화통신은 양회 특별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전군이 학습·관철해야 할 방향으로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이번 메시지가 일회성 수사가 아니라 군 전체에 하달되는 정치 신호임을 보여줌.
  - 15·5 시기의 군 현대화는 단지 전력 증강 문제가 아니라, 충성·예산·조직 통제를 다시 묶어 세우는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큼.

## 3. 중앙-지방관계: 차등 발전의 허용과 인사평가 규율 통제 강화

- 중앙-지방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적관(正确政绩观)” 아래 차등 발전을 허용하되 정치적 규율은 더 강화하는 방향을 내비침.
  - 시진핑 주석은 장쑤 대표단 회의에서 GDP 성장 뿐 아니라 구조적 고용문제, 산업 간 소득격차, 고령화·저출산, 공공서비스 수준을 새 계획기의 실제 과제로 지목하면서 이것을 “정확한 정적관” 문제와 연결함.
  - 이는 지방 간부들에게 성장률 숫자 자체보다 산업구조 전환, 민생, 리스크 관리, 장기 지속성을 더 중시하는 정치적 인사평가 기준이 내려오고 있음을 뜻함.
  - 중앙조직부장 스타이핑(石泰峰) 또한 후난 대표단에서 정확한 정적관 학습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방 지도부 교체(换届)를 계기로 각급 지도부와 간부대오를 강화하는 문제와 연결함.

- 왕이, 리간제, 허리핑, 리홍중, 왕샤오홍, 천원칭 등도 각자 대표단 발언에서 “두 개의 확립”, “두 개의 수호”, “정확한 정적관”, “안전과 발전의 통일”을 반복함.
- 3월 9일 전국인대 상무위 보고도 지방 인대와의 연락·협동 강화를 별도 항목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입법·감독에서도 중앙-지방 수직 정렬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15·5 계획 개시에 따라 그 목표를 수행할 지방 간부집단의 행동규율과 인사 로테이션을 중앙이 더 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시사함.

#### ○ 지방의 기층 거버넌스는 중앙의 제도적 틀과의 연계 및 정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자오러지(赵乐际)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개정 대표법의 학습을 전국인대 대표와 지방 각급 대표 전반으로 사실상 전면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상무위 구성원이 399명의 전국인대 대표와 상시 연락, 대표들이 대표소조·대표가(家)·대표참(站)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힘.
- 또한 2026년 과제로 전국 현·향(縣鄉) 2급 인대 선거 준비를 적시함. 이는 대표제와 선거·훈련·연락 체계의 집중화를 뜻함.
- 최고인민법원은 기층법원이 현급 종합거버넌스센터에 전면 입주했다고 보고하였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현급 검찰원이 종합거버넌스센터에 전면 파견됐다고 보고함.
- 중앙-지방관계에서 기층 거버넌스·민원처리·사법조정 네트워크를 중앙 틀 안에 묶는 것을 의미함.

#### 4. 국가-사회관계: 복지·사회거버넌스·정체성을 결합한 ‘관리된 포섭’

##### ○ 사회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단순한 사회 통제가 아닌 사회 서비스, 관리, 동원을 일체화하고자 함.

- 정부공작보고는 한 해 성과를 설명하면서 기층 거버넌스 강화, 신(新)고용군체 서비스·관리, 신방(信访) 업무의 법치화,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의 전면 수호를 정부건설과 사회거버넌스 항목에 넣음.
- 플랫폼 노동자, 청년 실업, 지역 민원, 재난·치안 대응을 모두 사회안정 관리의 일부로 본다는 의미로서 중국식 사회거버넌스는 단지 경찰이나 검열이 아니라, 민원 처리, 플랫폼 노동 통합, 기층 행정, 복지 전달체계를 함께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법적 책임 조항까지 별도로 둔다는 점에서, 민족정책을 선언이 아니라 일상적 행정·교육·사법의 규범으로 만들.

-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은 서문+7장, 64조로 구성되며, 당의 전면 영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공고화, 민족평등·단결·진보, 민족지역자치 제도,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핵심 원칙으로 함.
- 또한 학교 교육, 언어 문자, 이론 연구, 홍보 선전,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법률 수준에서 정리함.
-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은 사회 통합이 복지와 병행되는 정체성 통치의 법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부패와 국가안보의 결합도 더 강력해짐.

- 최고인민법원은 부패범죄 사건 3.6만 건, 4만 명을 처리했다고 했고, 최고인민검찰원은 감찰위 이송 직무범죄 3.05만 명을 접수해 2.9만 명을 기소했다고 보고함.
- 최고인민법원은 또 이른바 '대만독립 강경 인사'(台独顽固分子) 처벌, 반전복·반분열·반테러, 전략자원 밀수, 사이버범죄,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함께 묶어 제시했고, 최고인민검찰원도 홍콩 국가안전법 집행과 "대만독립" 분열범죄 처벌을 국가안보 파트에 포함시킴
- 정치적으로 보면, 반부패·국가안보·통일 문제를 사법 의제로 일체화 했다고 볼 수 있음.

## 5. 평가 및 함의

○ 한국에는 한중관계 복원의 창이 열려 있지만, 중국의 대외·대내 정책은 더 제도화 되고 경직되고 있어 선별적 협력과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시진핑 주석은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중국 주변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바 있음.
- 한국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공급망 협력, 디지털경제·벤처·실버·의료·바이오 협력, 문화교류의 단계적 복원, 그리고 서해 구조물 협의와 2026년 차관급 해양경계 획정 공식회담 추진에 공감하였음.
- 그러나 이번 중국 양회는 동시에 국가발전규획법, 국가안보체계 강화, 대만독립 세력 타격, 정치건군을 함께 내세움. 즉, 한국에 대한 실용협력은 가능하지만, 안보·주권·정체성 이슈에서는 중국의 유연성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움.

### Ⅲ 경제 분야

#### 1. 2025년 평가와 2026년 목표

○ 2025년은 14·5개년 계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이룬 한 해로, 중국 경제는 내수 증진을 통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줌.

- 국내 총생산(GDP)규모가 140조 1,900억 위안으로,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5% 달성함.
- 2025년 2분기부터 미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고용과 경제 안정을 위한 내수 증진 조치를 강화함. 특히 내수 증진을 위해 이구환신(以旧换新 :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2조 6천억 위안 이상의 상품 판매를 견인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양중(两重 : 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설비 교체 자금 집행과 사용을 가속화 하여 설비 구입 투자가 11.8% 증가함.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부동산 용지 공급을 통제하고, 주택 인도 보장(保交房 : 건설사가 분양한 주택을 완공해 인도하도록 보장하는 정책) 과제를 완료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에 대한 개선을 진행함.

○ 2026년은 15·5 계획의 출범 원년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4.5~5%로 제시함. 이는 과거의 고속 성장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됨.

- 최근 3년 간 유지되어 온 '5% 내외' 성장 목표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으로 제시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구조조정과 리스크 관리, 산업 고도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됨.
- 주요 성·시(省·市) 단위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의 전반적인 하향 조정 및 구간 목표 설정 경향은, 현재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시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시사함.
- 지방정부에서의 성장률 목표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에 질적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기반의 성숙한 발전 전략으로 해석됨.

표1.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와 실적

	2023	2024	2025	2026
경제성장률	5%내외			4.5-5%
소비자물가상승률	3%		2%	
신규취업	1,2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재정적자	3%		4%	
초장기특별국채	-	1조 위안	1조 3천억 위안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			3.8% 내외

자료: 역대 정부공작보고를 참고하여 연구원 작성

○ 성장 목표와 함께 친환경 전환 목표도 병행 제시됨.

- 중국은 '탄소중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양회에서는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3.8%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녹색·저탄소 전환으로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발전을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 사막(沙戈荒: 사막, 고비, 황무지)지역을 활용한 신에너지 기지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중점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됨.

2. 거시운용기조 :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 2026년 재정적자율은 4% 수준, 적자 규모는 5조 8,9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300억 위안 증가할 예정임.

○ 재정지출의 최적화와 함께 소비 진작, 사람에 대한 투자, 민생 보장을 확대함.

- 일반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처음으로 30조 위안에 도달하여, 전년보다 약 1조 2,700억 위안 증가함.
- 초장기 특별국채 1조 3,000억 위안을 발행해 양중(兩重) 건설과 양신(兩新 :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에 지속 지원함.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 3,000억 위안을 별도 발행함.
- 지방정부 특수채권은 4조 4,000억 위안을 배정할 계획이며, 지방정부 특별채권(전용채권) 프로젝트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중대 프로젝트 건설, 정부의 미지급 대금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 완화된 통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내수 확대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

○ **실물경제 활성화 중심의 정책 운용으로, 전국통일대시장 정책을 통해 내권(內卷: 내부의 과도한 경쟁)을 조정함.**

- 지방정부의 경제 촉진 행위에 대한 규범화,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장려,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세금 우대 및 재정 보조금 정책을 규범화함.
- 지방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과 세제 혜택을 규범화하고, 시장질서를 보다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강조됨.
- 재정·세무·금융 체계 개혁도 병행하며, 지방세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세원을 확충하면서, 금융기관 경쟁 질서를 정비하여 지방 중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및 민영경제의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의 강화**

- 2025년 양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민영경제촉진법> 이 2025년 4월 30일 통과됨. 이는 민간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본법으로, 민영 기업의 평등한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투자 의욕과 활력을 높임.

### **3. 산업정책 : 제도와 과학기술 혁신의 공통적인 추진**

○ **2025년 중국의 산업정책은 제도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과학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과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이 앞서는 한 해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583개 국가표준을 제정 및 개정함.
-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은 사회 전체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중은 2.8%였으며, 기술 계약 거래액은 10.8% 증가함.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수준이 높아짐.
- **(신질생산력의 안정적인 발전과 과학 기술 혁신 성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의약, 로봇, 양자 기술 등 연구 개발이 세계 선두권 △반도체 칩 자체 연구 개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주요 혁신 성과)** △텐원(天问) 2호 발사 성공(중국의 자국 첫 소행성 탐사선으로 중국 우주굴기를 보여줌)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의 대규모 응용 확대 △알룽창포강 하류 수력발전 프로젝트 착공(중국 티베트 지역의 수력발전소)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 선도
- **(산업부문의 최적화 성과)** △첨단 기술 제조업(9.4%)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9.2%) 증가 △산업용 로봇(28%)과 집적회로 생산량(10.9%) 증가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은

1,600만 대를 초과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은 2,000만 기를 돌파함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5.1% 감소함 △생태 환경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됨.

○ **현재 과학기술 혁신, 시장 진입, 성과 전환 등 분야에서 존재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병목 현상 해결을 중점으로 함.**

- 인재, 데이터, 기술 등 혁신 요소들이 지역과 부처의 장벽을 넘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배분 및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신기술, 신산업,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혁신 장려와 규범적 발전을 조율하여,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

○ **신질생산력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함.**

- 신질생산력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및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함. 기술이 수동적인 도구에서 자율 능력을 지닌 지능 주체로 진화함에 따라, '고정첨(高精尖:고급,정밀,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
- 반도체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 의약, 저고도 경제 등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미래 에너지, 양자기술, 구현형 지능(具身智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6G 등 미래산업을 발전시킬 것이 제시됨.

#### **4. 대외경제: 대외 불확실성 속 제도형 개방**

○ **중국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미중 관세 문제 등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여,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다소 하향 조정**

- 이는 대외 부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무리한 고성장보다는 대외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 내수와 대외개방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성장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정책 기초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의 지속 및 확대**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대외경제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디지털 분야 개방의 경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함.

## ○ 쌍방향 투자 협력 확대와 공급망 재편 및 대응

- 외국인 투자 유치와 대미투자 확대를 병행하는 쌍방향 투자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외 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통해 외국인 투 자의 중국 내 재투자과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함.
- 산업망 및 공급망의 합리적인 국경 간 배치, 해외 종합 서비스 체계 정비, 대외 투자 리 스크 관리, 해외 이익 보호를 강화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보완하고자 함. 이와 함께 신용대출과 수출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며, 위안화의 국경 간 사용으로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제고할 계획임.

## 5. 평가 및 함의

### ○ 대외적인 불안정 요소에 헤징(Hedging)을 위한 내수 주도 경제 회복력 강화

- <보고>의 경제 정책은 대외적 불안정 요소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 미중간의 관세 문제,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 확산 등 외부 충격이 가중 되는 대외환경 속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 자체를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 ○ 중국 내수의 발전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변수가 되었으며, 4.5-5%의 경제 성장률로 5%의 과도한 경제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 도시화, 민생개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발전 등의 경제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키 고자 하며, 특히 첨단 제조업,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녹색산업 등이 핵심 분야가 될 것

### ○ 중국의 15·5 계획 출범 단계부터 고속 성장보다는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통 한 발전 전략을 제시함.

-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선점하는 데 앞으로의 5년이 중요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성장률과 수치에 의존하기보다 산업 경쟁력, 기술 자립, 기술 표준 제시 등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짐.

## IV 사회 분야

### ○ '민생중시(民生为大)'와 인적 자본 투자로의 전환

-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 구조적 변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민생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내수 확대와 사회 안정을 위한 '자산'으로 재정의
  - 국무원 총리 리창(李強)은 3월 5일 정부공작보고에서 '민생을 중시하고, 보편적, 기초적, 최저생활보장형 민생 건설을 강화한다(坚持民生为大, 加强普惠性、基础性、兜底性民生建设)'는 기초를 제시
  - 특히 15.5규획의 목표 지표 20개 중 7개가 민생 분야에 집중된 것은 역대 5개년 규획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임.
  - 인민망(人民網)이 양회 직전에 실시하는 '전국 양회 조사'에서 '민생보장(民生保障)'이 수년째 네티즌 최고 관심 키워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조정,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함.
  - 이는 민생 정책을 통해 내수 확대(경제발전 구조 전환)와 사회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15.5규획에서 물질 자본투자와 인적 자본투자의 긴밀한 결합을 제시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함.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과 소비 여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임.

### 1. 2025년 주요 실적과 15.5개년 규획 목표

#### ○ 2025년 사회분야 주요 실적

분야	주요 성과
소비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 사상 최초 50조 위안 돌파, 경제성장 기여율 52%
고용	도시 신규취업 1,267만 명(목표 초과 달성), 실업률 5.2% 수준 유지.
의료·복지	주민기초연금 월 20위안 인상, 육아보조금 3,000만명 수혜, 장기요양보험제도 3억명 포괄
교육	취학 전 1년 무상교육 1,400만명 수혜, 대학 학과 구조 재편 및 현금 고등학교 건설 강화

-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 구조에서 내수 중심 성장 모델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고용 분야에서는 도시 신규취업 규모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고용 안정이 일정 수준 유지되었지만,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인해 신취업형태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제도 정비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
-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육아보조금 보급,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본격화함.
-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학과 구조를 산업 수요에 맞게 재편하고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15.5규획(2026~2030) 민생 분야 목표 지표

-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의 20개의 목표 지표 중 7개(취업, 소득, 교육, 의료, 건강, 양로, 보육)를 민생 분야에 할당함.
- 물적 인프라 투자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계의 미래 불안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민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

분야	2025년	2030년 목표
도시 실업률	5.2%	<5.5%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5%	GDP성장율과 동기화
노동인구 평균 교육 연한	11.3년	11.7년(+0.4년)
1000명 당 의료 인력	의사 3.1명 간호사 4.3명	의사 3.7명 간호사 5.1명
요양시설 간호 병상 비율	68%	73%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이용률	-	연평균 6%p 확대
기대수명	79.25세	80세

## 2. 노동시장: '고용은 민생의 근본' 기초 유지

### ○ 고용의 질적·양적 확대

-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처음으로 '고용 안정·일자리 확대·일자리 질 향상 행동(穩崗扩容提质行动)'을 체계적으로 제시
  - 고용안정(穩崗): 무역, 건설, 숙박, 음식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고용확대(扩容): 디지털 경제, 첨단기술제조, 현대 서비스업 등 신흥·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군과 일자리 창출
  - 고용의 질 향상(提质): 최저임금표준조정기제 실행, 노동시장 질서 규범화, 농민공 임금지불 보장제도 관철 등을 통해 노동자권익 보호 강화
- \* 2026년 고용 목표: 도시 조사실업률 5.5% 수준 유지, 도시신규취업 1,200만명 이상. 이를 위해 2026년에 들어 이미 31,000회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2,200만 개의 일자리를 공개했다고 밝힘.
- 창업 대출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창업 유도·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취업 및 창업 촉진 정책 마련
-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 환급금, 사회보험 보조금, 특별 대출 등 고용지원 정책 확대

## 3. 사회보장: 체계 완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

### ○ '일로일소(一老一小)' 정책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과 내수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

- 보육서비스 확대, 육아 보조금 보급,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 보급 등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경우 관련 산업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2024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3억명을 초과했으며, 전국에 3,500만명의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음.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약 800만개의 돌봄 일자리가 창출되고 3000억 위안 규모의 소비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일로일소' 정책은 가족 단위 소비능력 확대와도 직결됨. 육아보조금으로 30~40대 핵심 소비층의 부담이 줄고, 장기요양보험 보급을 통해 '한명이 일을 못하면 온 가족이 흔들리는' 구조가 완화된다면, 중국 가계의 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음.

#### ○ 유연고용·신취업형태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편입

- 2025년 기준 중국의 유연취업 노동자 수는 약 2억 명, 신취업형태 노동자 수는 8400만 명에 달함.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고용 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사회안정의 기틀을 마련

#### ○ 법제화를 통한 소비 장벽 해소

- 사회구제법·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 등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고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꺼이 소비하도록(能消费、敢消费、愿消费)' 하는 정책 비전 재천명(양회기자회견)
- 이는 소득 부족, 미래 불안, 소비환경 등 소비의 3가지 장벽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줌.
- 보조금 지급이나 이구환신(以旧换新)과 같은 단기적인 수요 자극 정책에서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완비를 통해 가계 과잉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음.

### 4. 공공서비스: 교육과 의료의 평등화 추진

#### ○ 교육 자원의 균등화와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공급체계 구축

- (기초 교육 확대) 학령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치원 교육의 보편적·무상 정책을 완비
- (중등·고등교육의 내실화) '현급(县级) 고등학교 진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순유입 지역 및 낙후 지역의 고등학교 공급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직업교육 질적 고도화) 신흥·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대국장인(大国工匠)' 육성을 위해 직업학교의 운영 역량 강화, 기술 변화(AI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문 인재 공급 체계 구축

####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기층 의료역량 강화

- 2025년 기준 중국 주민의 90% 이상이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서비스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 24위안 인상
- 의료·의료보험·의약 협동 발전 및 거버넌스 기제 정비, 공익성 지향 공립병원 개혁 심화

- 현금·기층 의료기관 운영 보장, 취약한 진료과목 역량 강화, 기층 가정의사 계약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 다층적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하여 상업 건강보험 발전 가속화, 혁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고품질 발전 추진

## 5. 평가 및 함의

- 중국은 성장 둔화 국면에서 투자 중심의 경제 발전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의 법제화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중국이 내수 부진의 원인을 소득 수준이 아닌 제도적 불안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정책들이 더욱 전면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중앙정부의 민생 목표와 별개로 실제 집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정책 실효성을 제약하는 최대 변수임.

## 부록 양회 일정

○ 대회 기간 : 2026.03.04.(수) ~ 2026.03.12.(목)

일시	구분	진행상황 및 안건
3/4 (수)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 주석단 및 비서장 선출</li> <li>- 대회의사일정 초안 표결</li> </ul> </li> <li>• 예비회의 후 대회 주석단 제1차 회의 개최</li> <li>• 언론브리핑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 대변인이 대회의사일정 및 인민대표대회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내외 신 기자 질문에 답변</li> </ul> </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4차 회의(이하 전국정협) 개막식</li> <li>• 전국정협 제1차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심의·통과</li> <li>-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청취</li> <li>- 전국정협 상무위원회의 제14기 3차 회의 이후 제안 업무 상황 보고 청취</li> </ul> </li> </ul>
3/5 (목)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이하 전국인대) 개막식</li> <li>• 전국인대 제1차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 청취</li> <li>-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 심사</li> <li>-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및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심사</li> <li>-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 상황 및 2026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와 2026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심사</li> <li>- 리홍중(李鴻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초안' 설명 청취</li> <li>-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설명 청취</li> <li>-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설명 청취</li> </ul> </li> <li>• 각 대표단 전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공작보고 심의</li> </ul> </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개막식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공작보고 청취</li> <li>- 생태환경법전 초안 설명 청취</li> <li>-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설명 청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설명 청취</li> <li>• 소조회의 개최</li> <li>-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및 제안 업무 상황 보고 심의</li> </ul>
3/6 (금)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대표단 전체회의 개최</li> <li>-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 초안 심사</li>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정부공작보고 심의</li> <li>-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 초안 심사</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별 연합회의 및 소조회의 개최</li> <li>- 정부공작보고 토론</li> <li>-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li> <li>•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 초안 토론</li> <li>-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li> </ul>
3/7 (토)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계획보고 및 초안, 예산보고 및 초안 심사</li> <li>•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li> <li>-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 초안, 계획보고 및 초안, 예산보고 및 초안 심사</li> <li>- 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제출</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조회의 개최</li> <li>- 정부공작보고, 계획보고, 예산보고 토론</li> <li>• 제2차 전체회의 개최</li> <li>- 위원 대회발언 진행</li> </ul>
3/8 (일)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생태환경법전 초안 심의</li> <li>-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심의</li> <li>-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심의</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조회의 개최</li> <li>-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토론</li> <li>• 제3차 전체회의 개최</li> <li>- 위원 대회발언 진행</li> </ul>
3/9 (월)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전체회의 개최</li> <li>- 자오러지(赵乐际)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청취</li> <li>- 장쥘(张军)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청취</li> <li>- 잉용(应勇)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청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정비 작업 상황 및 관련 법률 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 심의</li>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li> <li>-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정비 작업 상황 및 관련 법률 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 심의</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정협 위원,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열석</li> <li>• 소조회의 개최</li> <li>- '양고(兩高)' 업무보고 토론</li> <li>- 각종 결의안 및 보고 초안 심의</li> </ul>
3/10 (화)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li> <li>- 생태환경법전 초안 수정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수정안,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수정안 심의</li> <li>-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계별(界別) 협상회의 개최, 기타 계별은 소조회의 개최</li> <li>• 소조회의 개최</li> <li>• 전국정협 주식회의 개최</li> <li>• 전국정협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li> </ul>
3/11 (수)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전체회의 개최</li> <li>-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li>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정부공작보고,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 연도계획, 연도예산에 관한 4개 결의 초안 심의</li> </ul>
	전국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14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4차 회의 폐막식</b></li> </ul>
3/12 (목)	전국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소조회의 개최</li> <li>-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3개 결의 초안 심의</li> <li>-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정비 작업 상황 및 관련 법률 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 비준 결정 초안 심의</li> <li>• <b>제3차 전체회의(폐막식) 개최</b></li> <li>- 정부공작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li>-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초안 표결</li> <li>-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표결</li> <li>-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표결</li> <li>-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및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li>-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 상황 및 2026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li>-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li>-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li>-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 표결</li> <li>-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 정비 작업 상황 및 관련 법률·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 비준 결정 초안 표결</li> </ul>
--	--	---

## 부록 정부공작보고 요점 정리

### 1. 2025년 업무 회고

- 국내총생산(GDP) 5% 성장
- 도시 신규 취업자 1,267만 명
- 식량 생산량 1조 4,300억 근 달성
-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 1,600만 대 초과

지난 5년간:

- 국내총생산 연평균 5.4% 성장
-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 16년 연속 세계 1위 유지
-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연평균 5.4% 증가
- 도시 신규 취업 누계 6,000만 명 초과

### 2. 15·5 시기의 주요 목표와 중대 과제

-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
- 사회 전체 연구개발비 투입 연평균 7% 이상 증가
-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누적 17% 감축
-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2.5%까지 확대
- 노동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11.7년으로 제고
- 1인당 기대수명을 80세로 향상
-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약 1조 4,500억 근으로 확대
- 에너지 종합생산능력을 58억 톤 표준석탄 수준으로 제고

### 3. 2026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 경제성장률 4.5%~5%
- 도시 신규 취업자 1,200만 명 이상
- 주민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 안팎
- 식량 생산량 약 1조 4,000억 근
-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8% 감축
- 재정적자율은 약 4%로 설정할 예정,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300억 위안 증가
-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위안에 도달할 예정
- 초장기 특별국채 1조 3,000억 위안 발행 예정
- 지방정부 전용채권 4조 4,000억 위안 배정 예정

### 4. 2026년 업무 과제

#### 1. 소득 증대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을 제정·실시하고, 저소득층 소득 증대, 주민의 재산 소득 확대, 임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서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예정

#### 2. 소비

-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을 투입해 소비재 이구환신(노후 소비재 교체 지원)을 지원

#### 3. 투자

- 중앙예산 내 투자 7,550억 위안을 배정하고,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 8,000억 위안을 “양중(兩重)” 건설에 배정할 예정

#### 4. 신질 생산력

-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주력산업을 육성
- 미래에너지, 양자과학기술, 6G 등 미래산업 육성·발전
- “인공지능+” 전략을 심화·확대

5. 전국 통일대시장

- 생산능력 조절, 표준 선도, 가격 집행, 품질 감독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소모적” 경쟁을 집중 정비

6. 대외개방

- 부가가치 통신, 바이오기술, 외자 단독 투자 병원 등 분야에서 개방 시범 확대

7. 농촌 전면 진흥

- 제2차 토지도급 계약 만료 후 추가 30년 연장 관련 성 단위 시범사업 전면 추진
- 제4차 전국 농업총조사 실시

8. 신형 도시화

- 농업 이전 인구의 도시 정착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유입 지역에서 중학교 졸업시험 응시 등록 조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

9. 고용

- 고용 친화적 발전 방식을 구축
- 고용 안정, 일자리 확대, 질적 향상 행동을 실시

10. 교육

- 무상 학전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 공급을 확대

11. 의료·보건

-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을 24위안 인상

12. 사회보장

- 도시·농촌 주민 기초연금의 월 최저기준을 다시 20위안 인상
- 초혼·첫 출산 가정의 주거 보장을 강화, 다자녀 가정의 주거 개선 수요를 지원

13. 녹색 발전

- 국가 저탄소 전환기금 설립, 수소에너지·친환경 연료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

14. 부동산

- 도시별 상황에 맞춰 신규 공급을 통제하고, 재고를 해소하며, 공급의 질을 높이고, 기존 미분양 상품주택을 다각적 경로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